

“금융 취약고리는 국내외 금리차… 외자유출 우려”

금융위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가
은행 건전성 문제 초래도

‘대출금리 조작’ 지적엔
최종구 “제재 장치 마련”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조작 등은 행의 부적절한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경제상장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 부적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을 밀도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나?”고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상 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시

장 불안에서 가장 악한 고리가 어디인지 를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언

급을 피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제 의원이 출석 요청을 철회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공매도 위반 제재 수준 높일 것”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

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일부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ICO가 갖고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 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양쪽을 최대한 균형 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metroseoul.co.kr

野 “최저임금·일자리 줄이는 정부냐”

환노위 노동부

與 “과도한 비판, 국민적 갈등 야기”
이재갑 장관 “구조적인 요인 겹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12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 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다.

송 의원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신창현 공공택지 유출’ 놓고 이틀째 공방

국토위

LH 이 부장 발언대 사안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 회의 지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유출’을 놓고 이틀째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토위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사건이 국감장을 달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신 의원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LH 이 모 부장을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부장의 국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합의가 안 됐고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취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신 의원에게 돌려달라고는 안 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은 또 “자료 유출에 책임을 느끼나”라는 민 의원 질문에 “자료에 ‘대외비’ 표시는 없었지만, 의원실을 나올 때 대외 유출 금지 자료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신 의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 고발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체신화 기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여기구 의원, 국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중기부가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중기부에는 286건이 접

수됐고, 이 중에서 266건이 처리 완료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도 각각 54건, 35건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고작 17건이었다. 전체의 6.4% 수준이다. 하도급법이 13건, 공정거래법이 4건이었고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신고한 사건 가운데 중기부는 93.6%(249건)를 미고발로 처리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6대 시중銀,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

고용진 의원, 금감원 자료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 등 6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74%로 가장 많이 늘었다.

KB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같은 기

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왔다.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로 되었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주주로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 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 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 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고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